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 4.9.(목)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목)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교수(전북대)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하여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 및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짚었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수요가 단순노무직 뿐 아니라 숙련 기능인력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순노무직, 중숙련직, 고숙련직에 조응하는 3개의 기능직 외국인력 트랙을 설정하고,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숙련 외국인력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도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장변경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일정한 시기(1~2년)에 대한 제약은 필요하고, 요건 개정을 통해 근로자 및 사업주 보호의 두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 업종·지역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장기근속 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센터 기능 확충 및 민간취업지원서비스 체계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지원과 숙련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체류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중소·영세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수도권 쏠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토론회 개요
-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손동희 (044-202-7149)
			주무관	문지희 (044-202-7154)



붙임 1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토론회 개요

□ **[일시 · 장소]** '26.4.9(목) 14:00,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

□ **[주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 참석자(안)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장관

○ (발제) ①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

②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

③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 (토론) 좌장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 (노·사)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훈 외국인력지원실장

- (전문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이민정책연구원 유민이 정책연구실장

문길주 前 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윤용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정 부) 외국인력담당관 한은숙 과장

□ 진행 순서(안)

※ 행사 전체 공개

시간		내용
14:00~14:10	(`10)	▪ 기념촬영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고용노동부 장관
14:10~14:55	(`45)	▪ 발제 - ①한국 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생활 지원(설동훈) ②숙련기능 외국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노용진) ③사업장변경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이규용)
14:55~16:25	(`90)	▪ 토론준비 및 토론
16:25~16:30	(`5)	▪ 마무리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론회에서는 전체 외국인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법·제도와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체류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노동 현장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는
1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을 지원하고,
인권침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체류 지원을 담당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도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정보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었고,
지도점검, 교육훈련 등의 지원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비자의 종류에 따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부처별로 제각각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종류가 달라도
이주노동자는 결국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일상생활부터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였을 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영세·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의 어려움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의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숙련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경험과 숙련을 쌓아
준숙련,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우수인력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틀도 촘촘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계의 이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사람 중심의 이주 노동정책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